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February 2013 **Vol. 43** 2

이달의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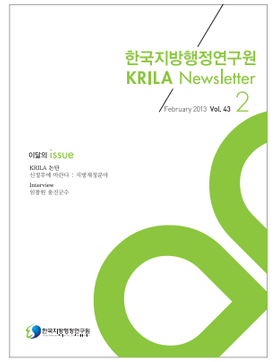
KRILA 논단
신정부에 바란다 : 지방재정분야

Interview
임광원 울진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2 February 2013 **Vol. 4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43호
발행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이달의 issue 신정부에 바란다

4 ● **권두언**
새정부에 기대하는 중앙 및 지방재정

7 ● **KRILA 논단**
신정부에 바란다 : 지방재정분야

10 ● **Interview**
임광원 울진군수

17 ● **자치단체탐험**
봄의 감각을 일깨우는 울진 나들이

20 ● **해외우수사례**
외국의 반부패청렴정책

23 ● **도시통계**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과 시사점

27 ● **연구원 동정**

27 ●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새정부에 기대하는 중앙 및 지방재정

배 인 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3년 2월 2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시작은 모든 이들에게 큰 기대를 하게 한다. 나에게도 역시 소망이 있다. 새정부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가 진일보하였으면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재정의 구조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많은 지방재정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적절한 제도와 구조는 갖추어지지 않은 듯하다. 우선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아직도 8: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큰 변화가 없다. 또한 계속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작년부터 시행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여러 차례 인하함으로써 지방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역시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하고, 늘어나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등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부채도 중앙정부의 큰 짐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8%에 해당하는 468조 6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부채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역대 최고의 부채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도 빨라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더욱이 중앙과 지방의 최종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지출을 지방의 지출에 포함하면 2004년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48.4:51.6 이었으나 2011년 그 비율은 42.8:57.2로 나타나,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재정을 크게 확충하여 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냥 지방에 이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 풀어야할 과제는 바로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화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들의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세입과 세출결정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급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간에 큰 괴리가 있어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지나친 재정적 의존으로 인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지방행·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지방세 확충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화 하는 방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안정성, 신장성, 보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세로 매우 적합한 세원이다. 우선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하였듯이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여야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 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소득관련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관련세의 경우 지역간의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세율 및 배분방법 등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지방세 분포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확충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의존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지출이 중앙정부에 비해 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를 굳이 증대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원중립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축소해야 하는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욱 적합하다.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축소하면 지방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가용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거나 지역적 누출효과가 적은 지역적 사무 등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은 과감히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자치사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율을 재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의 정도를 합리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조율이다.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요하고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에 대한 집행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면, 전체적인 재원규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이 모두 “win-win-win” 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를 기원해 본다.

신정부에 바란다
: 지방재정분야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최근 신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신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중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동 전략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을 하고 국가에서는 이를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지출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사회복지 등 재정적 어려움이 일반화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세부과제에는 몇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발견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이전재원을 축소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지방재정의 중심은 자체재원 보다 이전재원이 중심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전재원은 상대적으로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신장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운영의 책임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랄 해저드 및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세입측면에서의 한계를 자체세입의 지속적 증대와 이전재원의 축소 방향은 향후 재정분권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수입산정을 차등화하는 계획이다. 교부세와 함께 이전재원의 또 다른 중심축은 국고보조금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형평성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징수율 등을 고려한 효율성 측면이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재정력을 고려한 형평성 측면이 반영되어 두 재원의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접목되어 설계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양 제도의 기본이념에는 충실할 필요가 있는 바,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형평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중앙 투·융자심사대상의 확대 계획이다. 현재 중앙 투·융자심사는 광역 및 기초의 구분없이 사업비 300억원 이상(전액 자체재원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투·융자심사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심시대상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의 규모 및 성격과 무관하게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방재정 현실, 지방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신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시말해 지방재정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관리제도인 투·융자심사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국가의 사전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은 자체재원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 형평성을 완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 하에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된 시점에서 신정부의 지방재정정책 과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떠한 방향 하에서 정책을 집행할 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지방재정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정부의 지방재정정책에서는 부각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작금의 지방재정문제는 그 발생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감세정책, 지방의 현실고려가 미흡한 사회복지 결정,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지방재정정책의 강요 등 중앙정부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문제의 해결책도 일부 중앙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국고보조금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국고보조금 제도가 신정부의 지방재정정책에서 제외된 이유는 불분명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거와 달리 중앙의 정책에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재정운영을 통제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중복투자, 과잉경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갈등요인은 지방비부담에서 찾을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의 자의성, 비가시성, 재원압박 요인 등 향후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임에 자명하다. 결국 국고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틀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가능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율은 사전에 입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문제 특히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반영이 제한되어 아직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의 갈등 소지를 줄이고 협력적 상생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진귀한 보배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임 광 원
울진군수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울진군의 자랑거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울진군에는 자랑거리가 많아 울진(蔚珍)입니다. 울진(蔚珍)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진귀한 보배가 많은 곳이라 하여 울진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자랑거리는 소광리 울진금강송 군락지입니다. 우리민족의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금강소나무의 최대 군락지이며 1,600여ha에 걸쳐 200~3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여 그루와 500년생 넘는 금강소나무도 다섯 그루가 있습니다. 소광리에는 왕실전용 소나무군락임을 알리는 황장봉계표석이 있어 이 곳 소나무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금강이라고도 불리는 2억5천만의 나이를 자랑하는 성류굴은 전장 472m로 5곳의 못, 12개의 광장으로 형성되어 입구에서 끝까지 태고로부터 이어온 신비의 경관은 가히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영사계곡과 덕구계곡, 신선계곡은 한국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워지며 맑은 물, 깊은 숲은 찾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울진의 맑고 깨끗한 쪽빛바다

또 전국 유일의 자연용출 온천인 덕구온천과 백안온천은 응봉산과 백암산이 잉태한 온천답게 등산객들이 많이 산을 찾고 등산의 피로를 온천에서 씻는 안성맞춤 관광지입니다.

계절에 따라 연출되는 아름다운 숲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구수곡 및 통고산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젊은층이 좋아하는 승마,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요트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울진은 3욕의 고장답게 삼림욕과 온천욕,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구산해수욕장, 망양정해수욕장, 울진의 맑고 깨끗한 쪽빛바다 기성망양해수욕장, 나곡해수욕장, 후정해수욕장, 봉평해수욕장 등 동해의 맑고 깨끗한 쪽빛바다 해수욕장과 싱싱한 횟감을 저렴한 값에 맛볼 수 있는 낭만과 추억이 있는 동해바다가 있습니다. 관동팔경의 제1루인 망양정과 월송정이 있고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왕피천서머페스티벌, 울진송이축제가 계절별로 이어져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생태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역점시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민선5기 군정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에 찬 『행복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매진하여 왔으며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우리군이 가진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건설을 위해 그동안 신선계곡 탐방길,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왕피천 종합관광벨트 등의 조성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울진금강송의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파리 사진전 개최와 울진숲길 18로 조성으로 관광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으며 수토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 교육관광지로

대풍헌과 월송포진을 포함한 수토문화 유적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피천 하구 재래식 수산보를 개축하여 단절된 수생태계 복원 및 각종 어족자원인 연어, 은어 등의 회귀로 생태가 살아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숲

특히 산림산업화 측면에서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한 체험과휴양위주의 관광체험단지가 될 금강송 에코리움사업의 시작은 관광울진으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생태문화관광도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내 최고의 관광분야 "2012 한국관광의 별 생태관광자원 분야" 에서 「금강송 소나무숲」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생태관광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초 · 중 · 고생 및 대학생 교육경비 지원, 울진사랑 장학생 선발 지원, 학자금 · 장학금 지급, 울진빌리지스쿨 운영, 1학교 1원어민 강사배치,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향토생활관 지원 및 초등학생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명품교육 인재육성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공립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울진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개교하였으며, 평해공업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올해 3월에 개교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변화의 중심에 우리군이 선두 모델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군부 최초로 개최된 제49회 경북도민체전은 지금까지 개최되어온 타 시 보다 교통, 시설, 인력 등 모든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문화와 체육을 접목시켜 군부 실정에 맞는 조화로운 체전을 개최함으로써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6만 군민을 하나로 결속시킨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통해 구축된 체육 기반시설과 더불어 깨끗한 강과 산 그리고 바다가 공존하는 울진은 스포츠대회 최고의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연간 전국에서 3~4만여명의 스포츠인들이 찾는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의료원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오 · 벽지 및 다문화가정 임산부 등에 대한 포괄적 분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기반시설 확충, 보건소 건강교실 운영, 치매조기 검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의료취약지인 울진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으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주민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의 경관 · 환경 ·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2013년 신규지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권역이 일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이 이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울진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울진군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은?"

첫째,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군은 금강송 군락지, 왕피천, 청정 바다 등 때묻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비롯하여 백암온천 관광특구,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인 덕구온천과 같은 사계절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산, 바다, 온천을 연계해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천 · 숙박 위주의 시설 입지에 운동 · 휴양시설을 연계한 백암온천 관광지 조성과,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한 체험과 휴양위주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추진으로 웰빙과 힐링을 겸한 관광지로 조성하고, 덕구온천 군립공원계획 및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덕구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으며 왕피천 주변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왕피천 대교 설치로 엑스포공원과 해맞이공원, 염전체험장 등 주변관광 자원과 함께 활용성을 높이고, 해파랑길, 녹색경관길 등 관광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남대천 보행교 설치로 관광객 및 주민 이동편의성을 높여 관광자원의 이용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 덕구온천

둘째, 군민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울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와 '일자리'이며,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울진 1·2호기 건설, 국도 36호선 확포장 공사 등 지역의 국책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개발 및 지역 노인들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물론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와 차별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울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농어민들이 잘사는 농어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근간인 농어촌이 잘살고 농어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지역의 발전도 경제 활성화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지속 가능한친 환경 농업 실천, 농수산물 유통망 확충, 가공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대표작목 육성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 연안어장 자원조성 사업, 바다숲 조성사업과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있는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높아진 문화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성류문화제 등 문화행사 내용을 더욱 알차게 기획 추진하고, 축제행사시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전시 기회 확대와 죽변 드라마세트장 정비, 울진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 무료영화 상영 및 기획공연, 길거리 공연과 주인예술촌 운영 활성화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과 더불어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를 개최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며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및 금강송 송이축제, 울진워터피아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전국 최고의 생태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국내 전력의 12.2%, 원전의 34.2%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의 핵심지역이고, 원자력, 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특화발전을 창출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의 유치 등 융·복합 특화지역의 개발이 미흡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지역의 번영을 견인할 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 성장이 가능한 환경과 잠재력을 착실히 축적해 나가야 하며 기존에 구축해 놓은 에너지 인프라 관련 시설을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능을 추가하여 융·복합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소수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의 집적을 통한 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의 울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동시에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재배, 체험, 휴식 등을 연계해서 울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경험하신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세입 증대와 세출분야에서는 경상경비 축소, 지방채 감축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낭비요인 제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5%로 경북 군부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사회복지예산 등 매년 증가하는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 및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과 함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경상경비 축소 노력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투융자 심사를 통한 과잉·중복투자요인을 줄이는 한편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울진군은 전국 최대 원전보유 지역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으나 교통인프라의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해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이 지체되고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개설중인 국도36호선 직선화 사업 4차선 확장, 동해 중부선 및 분천~울진간 철도 연결, 남북7축(동해-포항)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담 · 정리 : 이 소 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봄의 감각을 일깨우는 울진 나들이

탱글탱글한 게살 맛의 지존 _ 울진 대게





'대게' 하면 보통 '영덕' 이 떠오른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동해안의 대게가 영덕으로 집산한 뒤 내륙으로 이송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단연 울진이기에 '울진 대게' 를 기억해야 한다. 울진 앞바다에 있는 거대한 암초 왕돌초에서 대게가 집중 서식하기 때문에, 왕돌초가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이 울진대게의 집결지이며 본고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게잡이는 보통 초겨울에 시작하는데, 대게가 제 맛을 내는 시기는 늦겨울에서 이른 봄까지이다. 그래서 매년 12월과 5월 사이에 울진 앞바다는 유난히 시끌벅적하다. 탱글탱글한 게살 맛의 지존, 맛좋기로 유명한 울진대게가 울진앞바다에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올라오고 시장 어디서든 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울진의 명물 울진대게는 이미 식도락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포근한 봄볕에 푸른 바다색이 옅어질 무렵, 식감을 자극하는 오렌지빛의 울진대게는 더 살이 오르고 우람하고 육중한 자태를 뽐낸다.

드라마틱한 동해바다 드라이브 명소 _ **죽변항**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뒤쪽, 아름다운 울진 앞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파스텔 톤의 목조 건물이 그림처럼 놓여 있다. 몇 해 전 방영되어 보는 이들을 울리고 또 가슴을 설레게 했던 텔레비전 드라마 〈폭풍 속으로〉 촬영 세트장이다. 죽변항은 울진 북단에 위치한 어항으로, 높이15.6m의 울진등대가 서있다. 오징어, 고등어, 꽁치, 대게가 많이 잡히고 특산물로는 미역이 유명하다.

죽변항 주변에는 덕천리 백사장, 봉평 해수욕장 등 동해의 푸른 물과 깨끗한 모래가 만든 해수욕장이 많다. 죽변에서 온양리까지 7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4km남짓한 드라이브코스 중간 중간 숨을 고르고 멈춰보면,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어촌마을의 풍경과 늘 푸른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동해바다를 함께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울진에 깃든 신선의 비경 _ **월송정 & 망양정**



관동팔경은 동해안 지방의 절경 여덟 곳을 말한다. 특별하게도 울진 지역에는 망양정과 월송정 두 곳이나 관동팔경에 든다. 누구라도 울진의 경관이 예사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울진 구석구석은 이미 관광명소이다. 월송정은 월국에서 송묘를 가져다 심었다는 설이 있고 신라의 영랑 · 술랑 · 남속 · 안양 네 화랑이 이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심신을 수련하며 달빛을 즐겼다 해서 월송정이라고도 한다. 찾아오는 이마다 깊은 숨을 가다듬게 하는 솔향기 가득한 소나무 숲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탁 트인 해방감을 선사하는 일출 광경 덕분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하다.







망양정해변 남쪽 언덕에 자리하여 동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망양정은, 관동팔경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바닷가 정자로서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절경의 연속이다. 송강 정철은 대표작 〈관동팔경〉의 대미를 망양정으로 장식했고, 겸재 정선도 〈관동명승첩〉으로 화폭에 담는 등 문인 · 화가들의 예술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월송정과 망양정을 차례로 올라 관동팔경의 묘미를 경험하고, 옛 글과 화폭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기 좋은 봄이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외국의 반부패청렴정책

국제투명성기구가 2011년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전년보다 네 단계가 떨어져 183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완전히 바닥권이다. 아시아권 16개국 중에서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덴마크와 핀란드, 4위는 스웨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권에서는 싱가포르가 5위, 호주가 7위, 홍콩이 14위, 일본이 17위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56%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하는 공직자는 2.9%에 그쳤다. 신정부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인 뉴질랜드와 아시아권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반부패청렴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Ⅰ.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뉴질랜드는 영어권 나라로 OECD 국가 중 안전도 1위 뿐 아니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도 역시 매년 상위권에 드는 부패 없는 청정한 나라다. 이렇게 매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을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의 철저한 추적조사 및 신속한 기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중대비리조사청법을 근거로 해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 · 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이다. 중대비리조사청의 전체 직원수는 35명으로 청장, 검사, 비리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요원인 회계사, 조사관 등과 행정 및 시설관리를 하는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정보수집 및 수사,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의 제척, 강제진술 청취, 중대비리조사청법상 위반행위 제재, 특수비리제보 접수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 · 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고,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중대비리조사청의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의 국민들은 날로 경쟁에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제 속에서 뉴질랜드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대비리조사청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뉴질랜드의 부단한 노력과 중대비리조사청에 대한 국민들의 한없는 신뢰는 뉴질랜드를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Ⅱ. 싱가포르의 탐오정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1950년대 이전에만 해도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공무원의 부패가 가장 만연한 부패의 천국으로 평가받았다.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 등을 들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부패 척결은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와 50년대에 부패가 만연하자 반부패부의 능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특히 부패척결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내의 부패가 아주 심했다.[1] 1959년 리콴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 · 수사 · 억제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였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부패행위조사국이 발족되었다. 처음 부패방지조사국이 직원 6명으로 발족할 당시에는 총무처에 소속해 있었으나, 그 뒤에 내무부, 검찰청, 법무부 등으로 소속이 차례로 변경되어 오다가 현재는 수상실 직속기관인 부패조사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 명이 연루됨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다.

부패조사청은 수상 직속의 독립적인 집행기구로, 조사국(탐오정국)과 행정 및 특별지원국의 양대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패조사청의 조사국(탐오정국)은 특별조사반을 비롯한 4개반으로 구성되어 사회 각계의 부정부패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탐오정국에서는 공직부정행위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 또는 동일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탐오정국의 직원은 이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서 발견된 장물 또는 증거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 은행계좌, 주식지분, 동산 구입, 지출상태 조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재산과 서류의 압수수색도 이뤄진다.

부패 척결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탐오정국의 활발한 감시 활동이 오늘날 이 나라를 청렴의 상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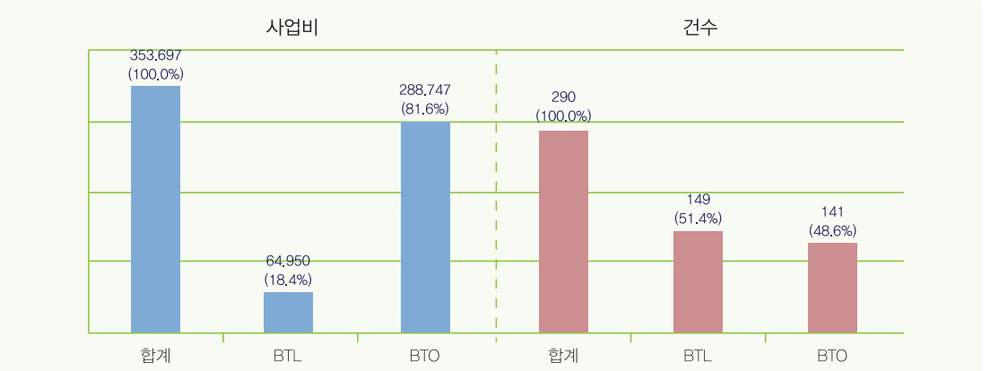
김 필 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과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개요

2012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BTL사업 149건(51.4%), BTO사업 141건(48.6%) 등 290건으로 추정된다.[1] 총사업비는 민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총 35조 3,697억원이며 이 중에서 BTL사업이 18.4%인 6조 4,950억원, BTO는 81.6%인 28조 8,74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사업규모 현황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9.5%에 해당하는 96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7개 단체 모두, 도의 경우에는 강원, 충남을 제외한 7개 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시의 경우에도 74개 시 중에서 53개 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여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반면에 군은 25개 자치단체, 자치구는 4개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은 시 · 도, 시에서 주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평균 운영기간은 21년이며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66%인 192건, 시공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5%인 73건, 시공을 준비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8%인 23건으로 집계되었다.

계층별로는 시의 민간투자사업이 131건에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특별시 · 광역시가 19%, 도 19% 등 시 · 도 민간투자사업이 38%인 117건에 달하였다.

1)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용어, 기준 등의 혼선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대략적인 현황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표 1〉 자치단체 계층별 민간투자사업 현황(건수 기준)

구 분	합 계	평균 운영기간	운영중	시공 중	시공 준비중
합계	290 (100%) 〈100%〉	21	191 (66%) 〈100%〉	72 (25%) 〈100%〉	22 (8%) 〈100%〉
특별시 광역시	58 (100%) 〈20%〉	23	41 (71%) 〈21%〉	14 (24%) 〈19%〉	3 (5%) 〈14%〉
도	59 (100%) 〈20%〉	11	32 (54%) 〈17%〉	23 (39%) 〈32%〉	2 (3%) 〈9%〉
시	131 (100%) 〈43%〉	19	81 (62%) 〈40%〉	32 (24%) 〈43%〉	15 (11%) 〈65%〉
군	37 (100%) 〈13%〉	20	32 (86%) 〈17%〉	3 (8%) 〈4%〉	2 (5%) 〈9%〉
자치구	5 (100%) 〈2%〉	22	5 (100%) 〈3%〉	0 (0%) 〈0%〉	0 (0%) 〈0%〉

2.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과 유형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은 계층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58개 민간투자사업 중 48개 사업이 BTO방식인 반면에 도, 시, 군, 자치구는 BTL방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군과 자치구의 경우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각각 78%, 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2〉 계층별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건수 기준)

구 분	합 계	특별 ·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90 (100%) 〈100%〉	58 (20%) 〈100%〉	59 (20%) 〈100%〉	131 (45%) 〈100%〉	37 (13%) 〈100%〉	5 (2%) 〈100%〉
BTL	149 (100%) 〈51%〉	10 (7%) 〈17%〉	33 (22%) 〈56%〉	73 (49%) 〈56%〉	29 (19%) 〈78%〉	4 (3%) 〈80%〉
BTO	141 (100%) 〈49%〉	48 (34%) 〈83%〉	26 (18%) 〈44%〉	58 (41%) 〈44%〉	8 (6%) 〈22%〉	1 (1%) 〈20%〉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을 보면 하수관거정비,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처리장,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반시설이 177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이어서 도로 · 교량 · 터널이 30개 사업에 10%, 문화 · 체육시설이 19개 사업 7%, 도서관 및 박물관이 17개 사업 6%를 점유하고 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SOC에 해당하는 도로 · 교량 · 터널이 18조 4,759억원으로 52%를 차지하며 환경기반시설은 9조 9,598억원에 28%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6건에 불과한 철도사업은 총사업비가 4조 8,720억원에 달하여 전체 사업비의 14%나 차지하고 있다.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기간도 차이가 나는 바, 철도 관련 민간투자사업이 평균 30년으로 가장 장기로 운영하는 반면에 정보화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은 평균 9년으로 단기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3〉 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유형	개수 (건)	총사업비 (백만원)	평균 운영기간 (연)	평균 사업비 (백만원)
합계	290 〈100%〉	35,369,784 〈100%〉	21	121,965
철도	6 (2%)	4,872,028 〈14%〉	30	812,005
도로 · 교량 · 터널	30 (10%)	18,475,976 〈52%〉	29	615,866
주차장	18 (6%)	305,444 〈1%〉	19	16,969
환경기반시설	177 〈61%〉	9,959,899 〈28%〉	16	56,271
의료시설(병원등)	8 〈3%〉	136,551 〈0%〉	18	17,069
도서관 · 박물관	17 〈6%〉	314,603 〈1%〉	20	18,506
정보화	3 〈1%〉	57,515 〈0%〉	9	19,172
지역개발	7 〈2%〉	82,277 〈0%〉	17	11,754
문화 · 체육	19 〈7%〉	864,584 〈2%〉	19	45,504
기 타	5 〈2%〉	300,907 〈1%〉	23	60,181

철도, 도로 · 교량 · 터널, 주차장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특별시 · 광역시에서 주로 도입하였다. 도의 경우에는 59개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68%인 40건이 환경기반시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환경기반시설은 시 및 군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바, 시의 경우 131개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7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의 경우에도 37개 민간투자사업 중 70%인 26건이 환경기반시설이 점유한다. 자치구의 경우 도서관 · 박물관이 3건, 문화 · 체육 2건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였다.

3. 정책적 시사점

민간투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고조된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장려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세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급증하는 지역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의 조달이 불가피한데, 이 와중에서 재정당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과 같은 유인책을 동원하면서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수요예측 실패, 계약 관련 법적분쟁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채무 관리 측면에서도 발행한도제 산정시 BTL사업의 임대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되는 상당수의 민간투자사업이 수요예측의 실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포함하거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엄격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한 이유이다.

조 기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일 시 / 2013. 2. 21(목) 11:00~12: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1월호)

– 국민통합과 주민 행복 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김현호,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